



2면

혁신도시 약취저감 상설협의체 구성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음 5월 3일) 제375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하계올림픽 유치 인프라 점검 본격

김관영 도지사, 전주월드컵경기장·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현장 방문... 도, 맞춤형 개선 계획 수립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인프라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련기사 3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검토 중인 전주월드컵경기장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외 36개 경기장에 대한 일제 조사 일정의 일환으로, 국제 기준 충족 여부와 시설 활용 가능성,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실사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체육시설 전문가 등 7명은 이날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찾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의 개최지로, 현재 3만 5,000석 규모다.

전북자치도는 이곳을 하계올림픽의 개·폐회식장과 축구 결승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람석 규모가 올림픽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준공 20년이 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보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방문한 전주시 복합스포츠타운은 올림픽 유치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 총 6,843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조성되는 대규모 체육단지다.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주요 시설 현장점검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활용이 검토 중인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64만7,000㎡ 규모 부지에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국제수영장, 스포츠가치센터, 실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공정을 40%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실내체육관은 올해 착공해 공정을 10%를 보이고 있다.

국제수영장과 스포츠가치센터, 실외 체육시설 등은 향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1,500면 규모의 지하·지상 주차장도 2029년부터 조성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우리 여건을 냉정하게 분석해 실현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복합스포츠타운은 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높일 핵심 자산으로, 도

와 시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장 배치안 초안을 마련하고, 경기장별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과제, 국가의 과제”

전북자치도 도민회 중앙회, 대선 앞두고 핵심공약 제안
새만금 글로벌화·미래산업 육성 등 국가 전략으로 요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 중앙회(회장 박영길·사진)가 전국에 산재한 350만 출향도민과 17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건의했다.



화를 선도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K-방산 허브 조성, 첨단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전북이 단순한 농업 중심 지역을 넘어 첨단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 건의는 전북발전과 지방 통상 상생 TF(공동위원장 유군 전주시민회장 겸 극동대 석좌교수, 양영두 한국흥사단 대표, 정운천 활동재단 이사장)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도민회는 "전북의 과제가 곧 국가의 과제"라며 대선 후보들이 이를 국정 야전대로 수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우선, 전북도민회는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하지는 제안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분산 개최' 원칙에 맞춰,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활용하고 전북에 부족한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의 국제적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새만금 개발을 국가 차원의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안도 포함됐다.

도민회는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 국제공항의 확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통해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네덜란드의 '푸드벨리'를 능가하는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식량안보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새만금을 세계적인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

관광 분야에서는 전북과 경북·충남을 연결하는 영·호·충 관광벨트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무주,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약용식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내륙관광철도를 신설해 김천, 구미, 상주 등 경북 서북권과 충남 내륙권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K-레이크 프로젝트, 힐링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 밖에도 도민회는 새만금 MICE 산업 및 관광 복합단지 조성, 탄소·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확대, 전북형 미래인재 양성 특구 설립, 국민연금 기금 활용 금융 특화단지 조성, 동학혁명 역사 문화 특화단지 추진 등 다양한 제안을 덧붙이며, "이들 공약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민회 광영길 회장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필연적 과제이며, 그 핵심에 전북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안한 핵심 공약들이 반드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민회 중앙회는 광영길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간 유대가 튼튼하며, 출향 도민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비롯해 각종 사회공헌과 정책 제안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과의 끈끈한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 5월 29~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 "꼭 신분증 지참해야"

전주 완산 19곳·덕진 15곳·익산 29곳 등 총 242곳... 주소지 다른 곳에서도 투표 가능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시행된다.

전북에는 242개소의 투표소가 있으며, 사전투표는 주소지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야 한다)을 지참해야 한다.

지역별 투표소는 전주시 완산구 19곳, 전주시 덕진구 15곳, 익산시 29곳, 군산시 27곳, 정읍시 23곳, 남원시 23곳, 김제시 19곳, 완주군 13곳, 고창군 14곳, 진안군 11곳, 순창군 11곳, 임실군 12곳, 부안군 13곳, 장수군 7곳, 무

주군 6곳 등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선거범죄 및 선거운동원 현수막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1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